

한국YWCA 2026 1차 이슈 브리핑

주요 이슈 브리핑

성평등x기후운동팀
남궁혜경 팀책임
2026.3.27

목 차

01

기후위기와 여성폭력

기온 상승이 가정폭력·여성살해에 미치는 영향

02

한국형 기후시민회의 출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및 기후시민회의 법제화

03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계획 분석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 계획 현황

04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신규원전이슈

AGENDA 01

기후위기와 여성폭력

기온 상승이 여성 대상 폭력을 어떻게 악화시키는가

01

01 기후위기와 여성폭력(프랑스 보고서 - 2026.3월)

4.7%

기온 1°C 상승 시
가정폭력 증가

생물학적 원인

더위로 세로토닌 저하, 공격성 증가
뇌 산소 부족 및 수면 장애 유발

28%

폭염 시
여성 살해 증가

행동적 원인

재난 시 가정 봉쇄로 위험 접촉 증가
대피·이동의 어려움 발생

40%

폭염 시 여성살해
증가 (스페인 연구)

구조적 원인

경제 불안·식량 부족으로 가부장제
강화
여성의 취약성이 더욱 심화

💡 시사점: 폭염 경보 발령 시 취약계층 보호처럼, 여성 폭력 위험 상황에 대한 경계·예방 조치와 실질적 대응정책 필요

AGENDA 02

한국형 기후시민회의 출범

02

02 한국형 기후시민회의의 출범 — 배경 및 운영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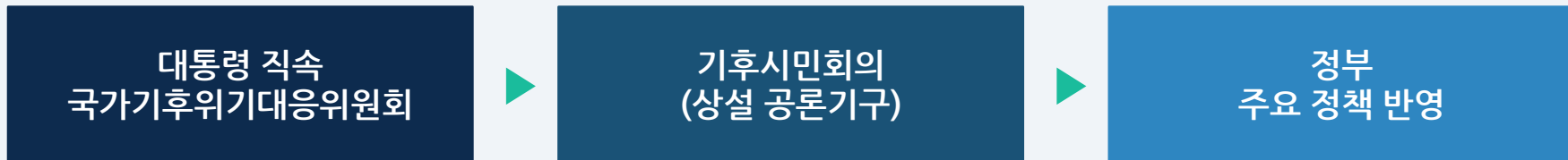
헌법재판소 결정 (2024)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에 헌법불합치 결정
→ 2031~2049년 감축경로 법제화 요청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2026.3.12)

기후시민회의를 대통령 직속 기구 산하 상설 기구로 법제화
지역·성별·연령 고려 의무화

운영구조



참여단 구성 및 선발

2,000명

후보군

무작위 전화번호 추출

200명

최종 선발

성별, 지역, 연령 반영 선정

110%

가중치

10~30대 미래세대

1년 단위

임기

매년 절반씩 교체

02 한국형 기후시민회의 — 핵심 논의·우려점·시사점

핵심 논의

- 2035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설정
-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관여
- 75% 이상 찬성 시 권고안 채택 → 기후위에 보고 → 정부 정책 반영

우려점

① 대표성 문제

성별·세대·계층·기후취약자 대표성
반영 여부 불확실

② 법적 구속력

정책 반영 요청 가능하나 이행 강제
조항 없음

③ 형식적 절차

'시민 워싱' 우려 — 실질적 숙의 보장
이 관건

시사점 및 YWCA 역할

지방정부에 기후시민회의 입법화 및 실행 요구·제안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사례(2026.6.30 출범, 120명) 참조 — YWCA형 기후시민회의 모델 시도

02 한국형 기후시민회의 — 경기도 사례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1. 운영기간: 2025년 6월 30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약 5개월간 숙의 과정을 거쳐 12월 15일까지 운영
2. 구성원: 도민 120명을 무작위+공모통해 선정(연령, 성별, 지역 등 고려)하여 위촉
3. 진행 방식
 - ① 사전 학습 및 오리엔테이션: 6월 말부터 온라인(Zoom) 등을 통한 사전 학습
 - ② 숙의 토론 및 현장 체험: 에너지 전환, 기후 격차, 자원 순환, 도시 생태계, 기후 경제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해 집중 토론
 - ③ 정책 발굴 및 도출: 도민들이 직접 기후 위기 대응 정책 20건을 발굴.
 - ④ 최종 권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 정책을 경기도에 권고안으로 제출

시사점 및 YWCA 역할

지방정부에 기후시민회의 입법화 및 실행 요구·제안

경기도 기후도민총회 사례(2026.6.30 출범, 120명) 참조 — YWCA형 기후시민회의 모델 시도

AGENDA 03

기초지자체 탄소중립계획 분석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현황

03

03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계획 분석 — 주요 문제점

25.3%

기초지자체 평균 감축률
(NDC 목표 40%에 미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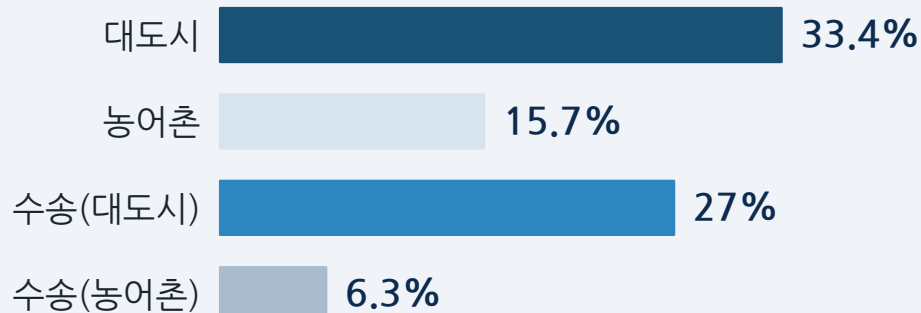
8%

40% 이상 감축목표
달성 지자체 비율 (2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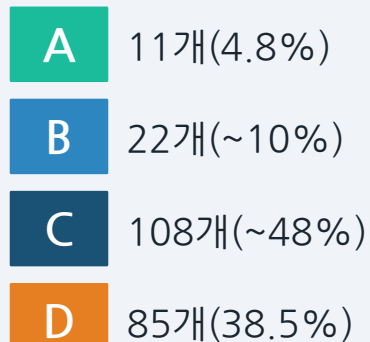
38.5%

D등급(전면 재설계 필요)
지자체 비율 (85개)

도시-농어촌 감축률 격차



등급 분포



주요 문제: 2030년 마지막 해에 9.3% 급감 설정(비현실적) · 형식적 계획 다수 · 데이터 신뢰도 저하
지역 특성 미반영

03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계획 분석 — 회원Y 지역 등급

A등급	수원시, 대구 달서구, 부산 영도구, 서울 강동구·노원구·성동구, 울산 동구
B등급	경기: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의정부시, 평택시, 하남시 전남/전북: 목포시, 여수시, 군산시, 익산시 충남/충북: 논산시, 천안시, 청주시, 충주시
C등급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부천시, 파주시 경남: 거제시, 창원시(마산, 진해 포함) 경북: 포항시 전남/전북: 광양시, 순천시, 전주시
D등급	강원: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춘천시 경남: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통영시 경북/전북/충북: 안동시, 남원시, 제천시
광역시	서울: 강남·서초 등 15개구(B), 강북·종로 등 6개구(C) 부산/대구: 영도(부산 A), 달서(대구 A)를 제외한 나머지 구는 B~D등급에 고루 분포 인천/대전: 부평구(인천 B), 유성·중구(대전 B)를 제외한 대다수 구가 C등급 이하 광주: 광산·동·북구(C), 남·서구(D)

AGENDA 04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 신규원전의 쟁점과 대안

04

04 신규 원전 건설 계획 — 쟁점과 대안

정책 개요: 대형 원전 2기(2.8GW, 2037~38 준공) + SMR 1기(0.7GW, 2035 준공) | 부지 공모
2025.1.30~3.30 | 6월 후보지 발표

안전 리스크

동해안 26기 밀집
(전국 70%↑)
활성단층 미조사 지진 위험

송전망 위기

한전 72.8조 계획의 56%
주민 반대로 지연 중

공론화 문제

형식적 공론화 절차

대안

- 재생에너지 + ESS 분산망 전환
- 송전망 갈등 없는 지역 균형 발전
- 재생에너지 구축 속도 10배 빠름
(6개월~3년)
- 지산지소

양곡

05

-
1. 전국공동캠페인 공모전: ~4월 10일(금) 5시
 2. 한반도평화대회: 4/25(토) 서울 광화문광장(예정)
 3. 「2026 YWCA 의료소비자 활동가 교육」
: 2026년 4월 2일(목)~5월 14일(목) 격주 총 4회
 4. 2026 긴급토론회 「위헌심판대에 선 비영리법인 허가주의」
: 4월 1일(수) 15:00-18:00 국회박물관 2층 체험관 / 온라인 중계

감사합니다

한국YWCA연합회
